# 문화재 '선의취득' 조건 강화 필요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1. 차별금지법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3. 문화재 도난 관련 법령
4. 사찰 제세 관련 법령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소유자 "장물 몰랐다" 버티기, 검찰 '악의취득' 입증 어려움**

**증언 아닌 구매자료로 확인을… 현 공소시효 기간 연장돼야**

지난 2006년 9월 25일 삼성문화재단은 "현등사 사리 및 사리구 일체를 사찰 측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조계종과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반환이 성사돼 이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과정에는 지리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현등사는 앞선 2005년 8월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사리 및 사리구 일체가 도난당한 것이라며 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현재의 현등사와 구 현등사는 다르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가 패소 사유였다. 정작 문제가 된 '도난문화재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회피한 판결이라 불교계 안팎의 빈축을 샀다.

당시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에서 쟁점은 △도굴품 인정 여부 △선의취득 성립 여부 △사리구 표기 '현등사'와 현재 현등사의 동일 인정 여부였다. 도굴품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도굴꾼 서 모씨가 자신이 현등사 사리구를 훔친 장본인임을 증언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고,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도난문화재 있어서 '선의취득'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선의취득'은 민법 제249조에 명시된 것으로 장물인지 모르고 '선의로 과실 없이' 구입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해주는 법조항이다. 하지만 도난문화재 문제로 넘어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2005~2006년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문화재단의 '현등사 사리구 소송'과 한국불교미술박물관(현재 폐관)의 '백양사 영산회상도' 문제의 공통점은 모든 소유자가 '선의취득'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15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는다"고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법정에서 소유자가 도난문화재를 선의취득이 아닌 '악의취득'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래 전 이뤄진 절도 행위들이고, 여러 번에 걸쳐 소유자를 바꾸면서 선의취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시효다. 현재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형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일부 문화재매매업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검거된 문화재매매업자의 사례가 그렇다. 그는 2001년 입수한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 1책을 15년 간 은닉하다가 빚을 갚기 위해 경매에 내놨다가 도난 문화재임이 확인돼 검거됐다.

A씨의 경우 공소시효를 잘못 이해해 다행히 〈삼국유사〉가 돌아올 수 있었다.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은닉죄는 숨긴 시점이 끝난 순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의취득 조항으로 인해 도난문화재임을 입증 못하면 범인은 잡아도 문화재는 환수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조계종을 오래 전부터 선의취득 개선과 공소시효 폐지·연장을 주장해왔다.

조계종은 주장하는 법 개정 요지는 "문화재 유통 시 선의취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은닉 행위자가 출처확인 및 취득 경위를 자료로써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등의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2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불교문화재들은 대부분 1970~80년대 도난된 불교문화재다. 도난문화재가 선의취득이 아님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소유자에게 문화재 구매이력과 취득경위를 문서 자료로서 선의취득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前원로의장 종산 대종사 영결·다비식 엄수

**전남 구례 화엄사서 종단**

**주요인사 800여 명 참석**



영결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단 중요소임자,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각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화엄사 교구 스님 등 3000여 스님들과 8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큰스님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구례 화엄사는 지난 6월 2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23일 청주 보살사에서 입적한 조실 혜광당 종산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다.

영결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단 중요소임자,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각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화엄사 교구 스님 등 300여 스님들과 전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신도 등 8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큰스님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 영결법요(인묵 스님), 행장소개(보광 스님)에 이어 종산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이 행사장을 숙연하게 했다. 이어 영결사(원행 스님), 법어(종정 진제 스님), 추도사(세민 스님), 조사(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중앙신도회장 이기흥, 전남도지사 김영록), 조가, 헌향이 이어졌다. 이어 화엄사 문장 명선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진제 스님은 "종산 대종사께서는 생사무상(生死無常)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를 단행하신 이래 본분사(本分事)인 생사해탈을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한 종장이셨다. 또한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원로회의 의장의 소임을 마다하지 않은 대자비의 수행사(修行事)를 보이시어 후학의 귀감이셨다"라고 회고했다.

법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영결사에서 "종산 대종사께서는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의 길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납자의 길을 가겠다며 발심 출가하시어, 오직 참선수행의 길을 걸으셨으며, 범어사와 천축사 무문관에서의 용맹정진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종단에 기여한 업적을 추모했다.

조사에 이어 화엄사 문장 명선 스님은 감사의 인사말을 통해 "영결식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중에게 화엄사 문도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훈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문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에 이어 법구는 화엄사 대중스님들에 의해 경내와 일주문 노재를 통해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장례위원회는 6월 29일 화엄사 초재를 시작으로 7월 6일 화엄사서 2재가 진행됐다. 3재는 7월 13일 보살사, 4재는 7월 20일 화엄사, 5재는 7월 27일 태안사, 6재는 8월 3일, 막재는 8월 10일 화엄사서 각각 봉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21대 국회 정각회 출범… 이원욱 회장

**6월 29일 창립총회 개최**

**부회장 이종배 의원 등**

**정각회원 40여 명 활동**



제21대 국회 정각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 정각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추대됐다.

국회 정각회는 6월 29일 오전 7시 30분 국회본관 3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 정각회장에 3선의 이원욱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원욱 정각회장은 전반기를 맡아 정각회를 이끌게 됐다.

부회장은 이종배·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광재·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아 활동하게 됐다. 수석간사는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간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감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제21대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는 40명의 국회의원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대 직후 이원욱 회장은 "국회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정각회가 나서서 보다 좋은 국회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신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각회는 총회에서 오랫동안 정각회 발전에 노력한 4선이상 의원인 서병수·이명수·정갑윤·김영주·안규백 의원을 고문으로, 주호영 의원과 강창일 前 의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정각회 창립총회에서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화쟁사상'을 주제로 법문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화쟁의 정치를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 이번엔 현실화될까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6월 29일 발의·입법예고**

2007년 첫 발의 이후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됐다. 지난 13년간 6번 발의됐다가 폐기·철회됐고 20회 국회에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회기에는 입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월 29일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의원 등 10인 의원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각 1명과 함께 발의정족수 10명을 채우며 첫 고비를 넘겼다.

이번 차별금지법 입법 여부에 종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여러 종교계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표명으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증오와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일 입법예고됐다.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발목을 붙잡았던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이틀 만에 반대의견만 6000건을 넘어섰으며(7월 2일 기준),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이번 회기에는 입법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종교,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知興堂 白雲 大講伯 永訣式 奉行 感謝 人事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본사·범어사, 백양사 원로이시고 저희 은사이신 지흥당 백운 대강백의 영결식에 직접 참석하여 주시고 조문해 주시며 조화를 보내주신 사부대중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9재 일정**

| | | | |
|---|---|---|---|
| • 초재 | 6월 25일(음 5월 5일) | 10시 | 백양사(061-392-0100) |
| • 2재 | 7월 2일(음 5월 12일) | 10시 | 용흥사(061-382-0574) |
| • 3재 | 7월 9일(음 5월 19일) | 10시 | 미륵사(010-6508-4707) |
| • 4재 | 7월 16일(음 5월 26일) | 10시 | 용흥사(061-382-0574) |
| • 5재 | 7월 23일(음 6월 3일) | 10시 | 용흥사(061-382-0574) |
| • 6재 | 7월 30일(음 6월 10일) | 10시 | 용흥사(061-382-0574) |
| • 막재 | 8월 6일(음 6월 17일) | 10시 | 범어사(051-508-3122) |

불기2564(2020)년 6월 27일

문도대표 진 우(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합장.